"주거복지에 1조1900억 소요… 기금 신설"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어제 청년주거 문제 정책 토론회

도 "10년간 재원 소요 상당" 주거복지기금 신설계획 밝혀 제주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읍·면·동 등에 인력 배치도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30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청년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주거복지정책에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1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30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경지 서울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김대현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장, 고우석 제주도 주거복지팀장이 청년주거정책과 제주형 주거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공공주택 2만1000호(공공임대주택 1만호+저렴주택 1만1000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올해 4867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1만호를 조기공급하기 위해 복합청사, 마을공유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용주차장 복합개발, 개발공사·LH 등과 공공주택지구지정, 도시공원 활용택지 공급, 원도심 노후건물 매입 후 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방법을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고우석 제주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10년 동안 주거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 및 주택기금을 포함해 9400억원~1조1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복지정책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원활한 재원 관리를 위해 올해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제주형 공동주택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개발공사에 주거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원스톱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해 도내 43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종합복지관 등에 주거복지 인력도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대현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장은 "현행 청년 기본 조례는 도지사로 하여금 청년의 주가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성준기자

국회, 임기 1년 남기고… 충돌 또 충돌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한국당 강력 투쟁 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응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임기 1년을 남겨둔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로 두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선거제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정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선거제도 마련과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가 해소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해온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기습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치욕의 날"이라며 전방위적 결사항전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지사 공약사업 사후 책임 묻는다

제주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집행 참여자 실명 공개·평가

도지사 공약 등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뒤 사후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정책수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정책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민구·강철남·강성의·강민숙·양영식·부공남·고현수·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사후 문제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공약 ▷장단기계획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 ▷3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성준기자

공공근로 2122명 추가 모집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 2122명을 추가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지방비 100억원과 복권기금 24억원을 포함해 124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 총 622개 사업에 2122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채용인원 712명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기관별로는 ▷도·직속기관·사업소 60개 사업 77명 ▷제주시 290개 사업 1174명 ▷서귀포시 272개 사업에 87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채용시기, 채용규모, 사업내용 등은 도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성준기자

제주경제 '먹구름'에도 정책 평가는 '우수'

도, 경제정책 성과 분석 결과 올 1분기 평균 9.13점 도내 경제지표 부진 속… "체감도 낮다" 지적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경제정책 실천과제 성과분석'을 실시했지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내 경제지표는 하향세인 반면, 정책 평가점수는 '우수'라고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탐라홀에서 제1차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확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9.13점으로 조사됐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8점은 보통, 9점은 우수 이상이다. 특히 평가항목을 보면 ▷사업목표, 정책방향과 부합성 9.29점 ▷사업추진 계획 적합성 9.21점 ▷예산의 적절성(과제대비 예산액) 8.98점 ▷사업수행 체계 및 절차의 합리성 9.07점 ▷사업의 성공 가능성 9.08점 등을 얻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부 실행계획들이 2019년 경제정책 실천과제의 취지와 부합되게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다만 예산의 적절성 부분에서 낮게 나타나 과제대비 예산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다. 제주도와 통계청 등 각종 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 부문이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제주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년대비 건설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를 보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3/4분기 88.4%로 올랐다가 4/4분기 때에는 −3.6%로 급감했다. 전년동기대비 관광객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1월 −14.4%에서 올해 1월 16.9%로 회복했지만, 3월 3.4%로 다시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 수립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중앙당 서울에? 지역 차별" 제주녹색당 헌법소원 제기

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며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해 제기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제주녹색당의 윤경미·진경표 공동운영위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등한 시민인 공무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성준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이사 모집 공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상임이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모집직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사업본부장(1명)**

□ 임 기

○ **2년(1년 단위 연임가능)**

□ 자격요건

○ 개발사업 및 국제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추신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추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신 분

□ 제출서류(별지 양식)

○ 지원서 1부(증빙자료 일체 포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19.5.1.(수) ~ 2019.5.10.(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3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인사관리실) ☎ 064)797-5557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 대상 여부는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면접일시는 개별 통보)

□ 기 타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추천위원회(인사관리실)로 문의하시거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www.jdcente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추천위원회

4·3 학술연구 지원 사업 공모 공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 71주년을 맞이하여 4·3과제 해결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3 학술연구 지원 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신진·중진 연구자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4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1. 공모 대상

분야	지원 편수	지원 금액	요 건
연구논문	○편 이내	편당 3백만원	· 원고지 150매 내외 미발표 신규 원고 · 국내 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 및 국외 학술지(SSCI급 이상) 발표 예정 원고 ※ 심사는 한국어본으로 진행함
저서	○편 이내	편당 8백만원	· 원고지 1,200매 내외 미발표 신규 원고 또는 박사학위논문 수정 원고 · 한국 내 출판 예정 국문 원고

2. 공모 주제

구분	주 제
가	1947년 3월 1일~1954년 9월 21일 전후 4·3 관련 사례, 조직, 인물 등에 관한 학술연구
나	1954년 9월 21일 이후 4·3 및 4·3 문제 해결 관련 현상 분석 및 평가, 전망 제시에 관한 학술연구
다	관련 국내외 과거사 문제와 4·3 및 4·3 해결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학술연구
라	기타 4·3의 진실을 밝히고, 4·3정신(인권·평화·화해)에 부합하는 연구

3. 공모 자격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연구소)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및 강사·학생 및 논문 게재 및 출판 역량이 있는 연구자
○ 학술지(등재후보지) 또는 저서 출판 계획을 갖고 있는 연구자 ※ 단독 또는 3인 이내 공동으로 지원 가능

4. 공모 일정 및 지원

○ 공모 기간 : 2019. 5. 20(월) 18:00까지 ○ 결과 발표 : 2019. 5. 31(금) 예정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연구 기간 : 2019. 6. ~ 11. ○ 최종보고서 제출 : 2019. 11. 20(수)

5. 응모 방법

○ 공모 신청서 교부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 방법 : 온라인(hkwon518@gmail.com) 및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5월 20일(월) 소인분까지 인정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4·3 학술연구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우)63313

※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eju43peace.or.kr 문의전화 : 064-723-4368 E-mail : hkwon518@gmail.com